

(2021.5.31. 월) 4대 그룹 미국 투자, 국내 고용 위축 최소화해야(한겨레)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394억달러(약 4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자국 내 반도체·배터리의 안정적 공급망을 만들려는 미국의 요구에 맞추면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뜻을 담은 투자 계획이다.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때맞춰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지원했다.

그러나 국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그 그늘도 짙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에 170억달러(약 19조1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엠(GM), 포드 등 미국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 생산을 위해 엘지(LG)에너지솔루션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은 140억달러(약 15조7천억원)를 투자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도심항공교통, 로봇틱스, 자율주행, 수소 사업 등에 74억달러(약 8조1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4대 그룹 합계 44조 원의 투자액은 우리나라 연간 설비투자 총액의 4분의 1에 이르는 거액이다.

기업들은 협력 파트너의 존재와 소비 시장 근접성, 미국 정부의 조세 감면이나 인프라 제공 등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니 반길 수만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가 수천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천개가 아니라 수만개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은 그림자가 짙다.

현대차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미국 제품 구매) 정책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은 2018년 기준 국내 총고용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 기여도가 크다.

그런데 국내 공장 신설은 거의 중단됐고, 자동화의 진전으로 완성차 업체의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부품 수가 적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수록 고용 창출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현대차는 고용 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들과 상생을 목표로 적극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

정부도 미래 산업의 국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핵심 부문인 연구개발(R&D) 분야에서라도 국내 투자를 적극 확대해 미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21.6.1 화) 44조원 대미(對美: 미국에 대한) 투자에 가슴이 아린다(중앙일보)

한·미 정상회담 때인 지난 21일 국내 4대 그룹이 44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던 소식에 가슴 한쪽이 아렸다.

우리 청년들이 애타게 쫓던 '꿈의 일자리' 수천, 수만개가 뭉텅이로 날아갔다는 자괴감 탓이었다.

1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전자를 보자.

지난해 8월 가동에 들어간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삼성 평택2 라인.

축구장 16개만 한 이 공장은 직접 고용만 4000명에 협력사 인력을 포함, 3만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다.

평택2 라인 건설비는 30조원.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같다는 가정 아래 이 땅에 19조원 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직원 2500여명에 1만9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생긴다.

함께 투자할 현대차·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까지 합치면 미국으로 넘어갈 대기업 일자리는 너끈히 5000개가 될 수 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기업의 예년 신입사원은 각사 당 한해 1만명 안팎이었다. 이번에 날아간 일자리가 얼마나 큰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지금도 42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가 직장을 찾아 떠돈다.

일자리만 생각하면, 외국에 나간다는 회사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뜯어말려야 할 판이다.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놓고 청년 실업을 챙기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 아니었나.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래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나갔던 자국 기업을 국내로 불러 들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왔다.

성과도 눈부서 2010년 이래 올 초까지 미 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140만개 중 절반인 70만개가 리쇼어링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 중 500만개의 일자리를 리쇼어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러니 한국 대기업이 얼마나 고마웠겠나.

그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기업들에 "생큐"를 연발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은 코로나가 퍼지기 전 미국의 실업률이 우리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2019년 한해 한국의 실업률은 3.8%, 미국은 3.7%로 0.1p% 낮았다.

해외 직접투자는 현지 생산이 훨씬 유리할 때 하는 게 원칙이다.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 물류비용이 많거나 관세가 높을 때 쓰인다.

그러나 반도체는 무관세 품목인 데다 물류비용이 거의 안 든다.

반도체 공장이라면 굳이 외국에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너무도 절실하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몫이어야 할 꿈의 직장도 내줄 수 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때는 젊은 장병의 목숨, 그리고 간호사·광부들을 독일에 파견할 때는 처절한 삶의 대가로 투자를 위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렇다면 이번엔 무엇을 얻었나.

한국군 55만명 분 백신을 챙겼다지만 미국이 풀겠다는 건 8000만회 분이다.

두 번씩 맞는다 해도 전체의 1.4%로 생색내기에도 부족한 양이다.

한국이 미국의 첫 백신 파트너가 돼 모더나 백신을 국내 생산하게 됐다는 것 역시 크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지 국내 공급을 위해선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백신 파트너십은 한국만 맺은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쿼드 정상회담 때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백신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 때도 양측은 이를 재확인했다.

또 모더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한다.

모더나 사장은 지난 21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포함, 아시아 몇몇 나라와 현지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란 보도도 있다.

어쨌거나 4대 기업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이상 무르기는 어렵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투자 외교'가 헛되지 않게 모더나 백신이라도 확실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대통령은 소중한 청년 일자리를 헛되게 날렸다는 원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8월 가동에 들어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2 라인. 축구장 16개 크기의 이 공장은 30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됐으며 직원 4000명에 협력사 인력 등 3만 여명의 고용 효과를 낸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2021.6.2 수) 44조원짜리 크랩 케이크(Crab Cake) 오찬(조선일보)



21일(현지시각)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오찬으로 크랩 케이크가 나왔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문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이 크랩 케이크를 사이에 놓고 오찬 한담을 나누고있다/트위터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역할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역대 다른 회담과 차별성이 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우리 기업이 양국 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 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394억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미국이 희망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가 모두 망라돼 있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악몽’에 시달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기뻐는지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일어서게 했다.

그가 “생큐, 생큐, 생큐”라며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친 장면은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희망대로 햄버거 대신 다른 음식이 나왔다.

청와대는 회담 전에 스가 일본 총리 방미 때 나온 햄버거 식사는 곤란하다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선호 메뉴를 알려줬는데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가 제공됐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스가 총리와는 달리 특별 대접을 받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도 귀국하면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제 정세를 잘 아는 한 외국인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스가 총리 방미당시 일본 측은 아무런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투자도 약속한 것이 없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44조원짜리 투자 계획을 밝힌 덕분에 크랩 케이크 오찬을 할 수 있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주자를 도왔던 K씨는 “삼성, LG, SK가 없었으면 생색도 못 내고 깃털처럼 가벼움만 더할 뻔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외교 역량으로는 이미 국제정치의 변방으로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고 분석했다.

이들의 관찰대로 정상회담에 맞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없었다면 크랩 케이크가 나오는 오찬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는 기회를 못 가졌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반(反)기업적 경제 정책을 펼쳐 기업을 숨 막히게 해 왔다.

조사 대상기업의 92%가 현 정권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 라고 답변한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다.

‘사회주의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본다’ 는 답변도 67%였다.

이런 문 대통령이 정작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자기 입맛대로 식사하고 온 문 대통령은 이제 차가운 바다에서 숨진 세월호 학생들에게만 고마워하지 마시라.

44조원짜리 오찬을 하도록 도와준 한국의 기업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늦었지만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비싼 식사를 하고 와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 만이라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누구 때문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레임덕 대통령이 이렇게 환대받고 왔는지 말이다.

기업의 역동적 활동으로 중세 시대 100년보다 1년의 변화가 더 빠른 시대에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소평가돼 온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도 대한민국의 활로(活路)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1.6.3 목) 백신 집착에 흔들린 외교의 품격(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미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축소되었던 동맹의 의미와 역할을 정상 계도로 다시 올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애를 먹었다.

미국이 트럼프 집권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집권기에 미국의 국력에 대한 평가가 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개별 국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한미동맹을 미국의 안보 서비스 제공이라고 본 그의 최대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였다.

그러한 트럼프식의 외교에 4년간 시달렸기 때문일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트럼프식 계산’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

대북 정책에서 보다 많은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내는 대신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얼마만큼 협조 의사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그나마 우리의 외교적 고민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였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국민의 방역 협조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었다.

올 초 본격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감염자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정상적으로 사회를 되돌리는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일 감염자 수가 우리보다 많아도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백신 접종 덕분이다.

미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정치권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한 공방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백신을 좀 얻어올 수 없느냐’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말았다.

정부는 백신 수급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 미국으로부터의 백신 지원 논의는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이 그 대가로 등장하는 수준까지 진행되었다.

백신과 반도체는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대미 협력이 백신 지원 여론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여 그러한 기대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에 더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000만 회분을 국제사회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에는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졌고, 500만 회분, 1000만 회분과 같은 헛된 기대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러한 국내 논의는 미국 내에서 매우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다.

회담을 앞두고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 미국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최대 관심사가 미국으로부터의 백신 지원이라는 데 놀랐고, 한국에서 그 대가로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생각한다는 데 더 크게 놀랐다.

방역 성공을 자부하고 백신 확보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백신협력은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나온 것처럼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백신 지원에 동맹 등 우방국이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일본이 자금과 저온 운송기술 등을 저소득 국가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같은 형식을 의미했다.

미국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이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한국의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에 더해 미국에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대가로 제공한다는 것은 한국 수준에 의문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5G 중국 부품 사용이 문제가 될 때 민간 기업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던 것도 꼬집었다.

이번 회담은 여러모로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미래 지향적 면모를 과시했으나, 아쉬움도 진하게 남는다.

햄버거가 아닌 크랩 케이크가 제공됐다고 해서 우리를 특별히 생각했다고 하기보다 이러한 백신 논의가 한국의 품격에 얼마나 타격을 주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적어도 외국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에 걸맞은 외교가 곧 우리의 품격이 될 것이다.

(2021.6.4 금) 미사일 주권, 자주국방 완성으로 이어져야(서울신문)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강제해 온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다.

그제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42년 만에 숙원사업이었던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탄생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미국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한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후 미사일 지침은 네 차례 개정돼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었고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으며 고체연료 사용도 허용됐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사정권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개발도 가능해졌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전격 합의한 것은 한국을 통한 중국 견제 목적과 함께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는 와중에 한국에만 족쇄를 채우는 건 명분이 약한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국력이 무시하기 힘들 만큼 성장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6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한층 속도를 높여야 하며, 이번 정상 회담 공동성명에도 언급됐듯 궁극적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편으로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를 한국의 진보 정권이 이뤄 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서만큼은 이념이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지침’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사일지침개정사

사거리 및 탄두중량 한도변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1979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1차 개정(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2차 개정(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t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t
3차 개정(2017년)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4차 개정(2020년)	군사용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경과

- 1979년 말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지침)' 체결
 -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 이내로 제한
 - 민간용 우주발사체(사거리, 중량 제약 없음, 단 액체연료만 허용)
- 2001년 1차 개정
 -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로 연장
- 2012년 10월 2차 개정
 -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
 -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사거리 줄이면 탄두 중량 확대 가능) 적용
- 2017년 9월 3차 개정
 -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철폐
 - 사거리 800km에 최대 2t 이상의 탄두 장착 가능
- 2020년 7월 4차 개정
 -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및 사거리 해제

우리 군이 개발 보유 중인 주요 미사일 현황



우주발사체 연료 비교

고체연료	액체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사체 내 항상 저장 가능 ·이동에 용이하고 신속 발사 가능 ·자가 액체연료의 10분의 1 수준 ·누출 위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 주입에 장시간 소요 ·이후 장시간 대기 불가능 ·가격 ·고가 ·누출 및 안전성 ·연소 불안정, 누출 우려

한반도 주변국 탄도 미사일 사거리



백신 허브·감염병 선진국 초석 다진 한·미의 '코로나 공조' (경향신문) ₩보너스 읽기 : 500원, 문제 각 100원씩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국내의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을 결합해 백신 공급 속도를 올리고 팬데믹을 조기 종식 시키자는 구상이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층 커진 의미가 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제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병에 담아 최종 제품을 만드는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다.

핵심공정은 아니지만,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공정이 국내에서도 시작되고 생산 플랫폼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모더나사는 정부와는 잠재적 한국 투자·생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국립보건연구원과는 mRNA 백신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어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공장에서 위탁생산 중인 노바백스사도 보건복지부·SK 측과 백신 개발·생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모더나 백신까지 현재 상용화된 백신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됐다.

미국은 '방역 선진국'인 한국에만 백신을 대량 공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내부 여론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한국 군인 55만 명이 맞을 백신 지원을 약속했다.

당초 우리가 희망한 '백신 스와프(Swap: 교환)'도 같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국 간 백신 공조가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수급·개발의 긍정적 신호가 커졌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밝힌 대로, "유통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분 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미국 제약사들과 협의"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의 백신 공조 약속을 살려 국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감염병은 반복될 수 있다.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후속일정도 구체화해 한국이 백신 공장의 역할을 넘어 백신 연구·개발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하루 500~600명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변이 바이러스도 창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

순간의 방심이 큰불로 번지는 것이 감염병의 속성이다.

백신 접종 속도와 양이 충분해질 때까지 거리 두기는 신중히 견지해야 한다.

